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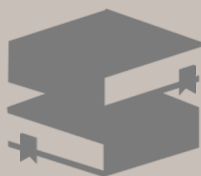
2021

전국학생행진

팸플렛 2호

행진

보궐선거  
특집호



# 팜플렛 목차

글1 ..... 1p  
다가오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  
누굴 찍을지 결정하셨나요?

글2 ..... 12p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으로 포장된  
내로남불을 멈춰라!

글3 ..... 23p  
빛으로 주는 재난지원금,  
빛으로 짓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당신의 표를 가져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 글01

: 다가오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 누굴 찍을지 결정하셨  
나요?



사진 출처 : <https://www.16personalities.com/>

요즘은 MBTI가 유행입니다. 인간의 성격유형을 16개로 나눠 자기 자신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조언해주는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ESTJ, ‘엄격한 관리자형’입니다. 저는 계획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답답합니다. 저와 반대 유형에 있는 사람인 INFP는 ‘열정적인 중재자형’은 아마 상상력이 풍부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를 상상할 수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겠지요. 보궐선거와 성격 유형은 무슨 상관일까요? 이번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인구 4분

의 1이 선출하는 대규모 재보궐 선거이자 다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선거구도는 문재인 정권 출범 4년차를 맞아 국정안정 대 정권심판입니다. 이런 선거를 앞두고, 20대 청년들이 민주당 집권 4년차를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재 민주당이 운영하는 나라는 '엄격한 관리자형'인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한 나라입니다. 어떠한 계획도 없고, 어떤 정책이 재난지원에 필요한지 검증, 조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중재자형'이 보기에 민주당이 운영하는 나라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재난 지원을 모든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지속한다면, 나라 경제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격유형을 말했지만, 한국은 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특히 20대 청년이 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오래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90년대생들은 사실상 경제위기가 아닌 시대에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만성적이라 경쟁이 아닌 상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 현실이 변화하기는커녕 더 나빠지지만 앓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현재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7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탄생했고, 각종 외신들은 한국이 대단하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겨레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민주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질문에 386세대는 “자유”, IMF 세대는 “비효율”, 20대는 “허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상당히 변화했음을 모두가 느끼던 2016년 말 촛불집회 앞에서, 20대는 ‘민주주의’가 자유도, 비효율도 아닌 허세라고 느꼈습니다. 사회를 바꿔본 경험도, 정치, 권리를 경험해본 적 없는 20대는 더이상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대가 ‘민주주의’를 보고 ‘허세’를 떠올리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청년들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으로 위로하기도 했고, 저항하지 않는 청년이 답답하다며 직접 저항하라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386세대에게 그 저항이 돌아가는 조국 관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386세대는 보수정당의 사주를 받은 청년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대 내부에서도 조국 사태에 대한 SKY 중심으로 '입학취소'를 말하는 집회가 적절한 저항인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20대 청년에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 사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국학생행진에서는 4.7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맞아,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말해보려 합니다.

# 1.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한국에 사는 우리만 불행한겁니다!

“허경영이 당선되면 사람들에게 1억씩 준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 하는 얘기는 정말.”

“국회의원은 직업이에요. 자기들이 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잘살게 해줘 바랄 수도 없고 바래봤자 헛일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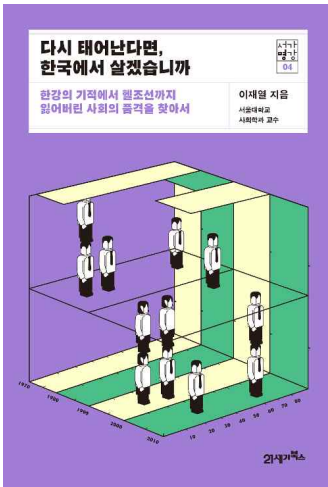


사진 출처 : 알라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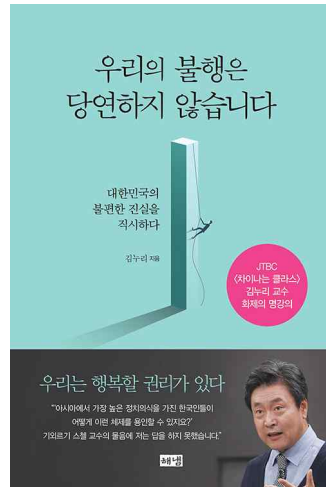


사진 출처 : 알라딘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라는 책에 나온 20대의 항변입니다. 책 제목부터 도발적인 이 책은 꽤나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입니다. (알라딘 기준 사회 정치 top100 5주) 한국이 선진국이

라는 것에 비해 국민 대다수는 이 성과를 ‘남의 이야기’로 느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저자의 주장. 20대에게 더이상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지만, 해결책은 매우 낮은 주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해결책으로 ‘더불어 사는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의 불안을 모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 불행이 당연할까? 에 대해 답하는 책도 있습니다. 독일 사회와 한국 사회를 비교하면서 쓴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는 한국 사회를 더 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 끌리는 이유는 한국 청년들이 어느 날은 절망하면서도 어느 날은 다른 사람도 모두 똑같이 살고 있다면 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날들을 자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불행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괜찮다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우리의 불행이 당연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저자는 한국의 86세대와 유럽의 68혁명 세대를 비교하면서, 86세대는 정치게임에 능했지만 사회개혁에 무능했고,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수구보수와만 경쟁해오며 도덕적 우월감만을 선취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86세대의 비전 없음’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 무력 같은 사회적 후과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우경화된 정치 지형, 그 사이 허구적 대립 속에서 이를 억제하는 중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책은 모두, 한국 청년 세대의 불행과 중도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복잡한 현실에 비해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비전과 정책이 부족한 한국 정치권의 현실을 짚고 있습니다. 20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은 모두 동일합니다. 종종 정치 혐오자로 지적되는 20대는 사실 정치혐오자가 아니라, 현재 20대들이 찍을 사람이 없는 정치권 현실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러한 정치인의 수준을 고려할 때, 중요한 해답은 정치인이 20대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게 정치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정치인의 수준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20대의 정치를 향한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행진에서는 정치인의 수준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20대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관심한 20대의 조건을 한 번에 뒤집어, 정당에 가입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 같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86세대가 20대를 정치혐오자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사안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선택할지, 그런 의견들이 모여 20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20대의 방법은 20대가 선거라는 최소한의 정치 참여를 시작으로, 보궐선거에서 정당들이 활용하는 전략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중도층의 나라, 대한민국



사진 출처 : 알라딘

80년대생 저자들이 쓴 『추월의 시대』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의 진입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실증적 통계로 고민하는 책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극단적 지지층만 보이는 정치 대립이 눈에 띄지만, 사실 한국은 ‘중도층의 나라’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대립으로 표현될 수 없는 중도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도층들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양쪽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는 80년대생 이후 젊은 세대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추월의 시대』에서 저자는 80년대생들이 산업화 세대의 자녀이

면서도, 민주화 세대가 대학에 남긴 학생운동의 흔적을 경험한 세대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진단을 만약 90년대생에게 적용해본다면, 90년대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386세대 혹은 언론이 생각하는 90년대생들은 ‘민주당을 싫어하고 보수화되어있는 남성 (소위 20대 보수화 담론) VS 페미니즘에 찬성하는 여성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되어있습니다. 90년대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90년대생은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언론, 기성세대는 90년대생을 주로 성별갈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모두를 지지하는 중도층이 강력하게 형성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0년대생들은 민주화 세대 즉 60년대 ~ 70년대 초반생들의 자녀이면서, 민주화 세대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보수정당은 안된다는 인식을 내면화하면서 자라왔습니다. 혹은 민주화 세대로 묶임에도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부모 아래서 자란 90년대 생들도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부족해진 일자리와 저성장 국면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 조건을 포함하는 경제성장 역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중도층은 선거를 앞두고는 특정한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중도층은 선거를 앞두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궐선거를 앞둔 20대들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20대가 어떤 의제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이 여전히 싫다는 마음이 더 클지, LH 사태 앞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이 싫다는 마음이 더 클지 알 수 없습니다. 20대, 특히 중도층 20대의 마음은 언론에 잘 대변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20대의 선택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3. 진짜 20대는 보수화 될걸까? 민주당이 문제다.

20대 남성은 꾸준히 다른 세대, 다른 성별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전 부산시장,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런 추세가 유지될지는 잘 모릅니다. 20대는 과연 무슨 선택을 하게 될까요? 20대가 정말 보수화된 걸까요? 행진에서는 민주당이 문제적이라는 전제 속에서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행진에서는 중도층이라 생각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중도층이 되어야 합니다. 임기 5년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서 1년짜리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이번 '보궐 선거' 자체가 특수한 선거인데, 이번 선거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서울시, 부산시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반대를 꺼내왔습니다. 보궐선거 직전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의 꿈으로 제시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 결정된 조치들을 모두 뒤집고 가덕도에 짓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환경단체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낙연 당 대표는 LH 직원 투기 사건 역시 LH의 권한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강화되었다고 제기했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 대한 반대만이 유일한 방향이자 논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에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거를 이겼다고 판단하는지, 이번 선거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거 전에 집행되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지를 얻겠다는 것은, 국가의 자원, 세금을 활용해서 표를 얻으려 하는 매표(買票)행위입니다. 또한, 부산 지역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원을 활용해 선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행태이지만, 재난 지원을 핑계로 정당화하면서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합리성과 계획 없이 이전 정권을 반대하기만 하는 정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정부를 20대가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은 1. 다가오는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누구 찍

을지 결정하셨나요? 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차례로 1.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개혁 정책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 대한 반대만을 가지고 있는지와 2. 가덕도 신공항과 재난지원금이 왜 대표행위인지를 고민해보려합니다.

## 글02

**: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으로 포장된 내로남불을 멈춰라!**



사진출처 : 뉴스피크



사진출처 : 사회진보연대

### 1. 청년 세대가 겪어 온 한국 정치의 모습 :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 구도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과 민주당계 정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이름만 바꾸며 꾸준히 경쟁해왔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 중요한 정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꼭 하는 행동이 생겼다

는 점입니다. 자신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후보라고 호소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이러한 풍경이 청년세대가 보아왔던 한국 정치의 굵직한 순간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국가의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 진보적인 인사들이 분향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인상 깊은 인물이었구나 생각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광우병 촛불집회가 있었지요. 뉴스든 거리에서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압박 수사가 있었다거나, 한미 FTA와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음모론 등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당시 촛불집회를 촉발한 한미FTA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사,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에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의 이야기를 말해보려 합니다. 반(反)이명박이라는 구

호는 그대로 반(反) 박근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노동조합 탄압, 언론 탄압, 정경유착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는 기득권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지요. 16년 촛불에서 ‘적폐 청산’을 구호로 대안 세력의 표상을 선취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각 사건에 대한 평가야 독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청년 세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의 역사를 공통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자신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 문제의 원흉인 ‘보수 정당(국민의 힘)’, ‘이명박-박근혜’에 대항하는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10년 넘게 들어온 셈이지요.

## 2. 문재인 정권 내내 반복된 분노와 원한의 정치



사진 출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선’ 혹은 ‘개혁 세력’으로 위치 짓고, 그 반대편인 국민의 힘을 ‘악’ 혹은 ‘적폐’라고 규정하며 분노를 동원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도 반복된 일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최근 3년을 살펴보며 민주당이 만들어온 개혁 vs 적폐, 선 vs 악의 프레임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개혁이 사실은 허구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2-1. 2019년,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사진출처 : 한국일보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용동학원·사모펀드 등 일가족의 재산형성 비리와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문제가 주된 의혹이었습니

다. 청와대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대의를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검찰은 터져 나오는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극성 지지자들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일부러 법무부 장관을 강압적으로 수사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또한 조국 일가의 비리를 비판하는 세력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노에 근거해 편 가르기에 치중한 결과 서초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의 집회가, 광화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자들의 태극기 집회가 이뤄지며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열에 대해 청년 세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기사에 실린 대학생의 반응인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조국 수호 집회 아니냐"라는 말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분노를 개혁으로 이미지메이킹 하면서 집권 세력과 관련된 수사를 적폐로 몰아붙인 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극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 조국 반대=적폐 세력의 구도를 만들며 집권 세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는 퇴행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못이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시스

템 파괴를 비판하며 사퇴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개혁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동원한 분노에 의해 선택적으로 적용된 사례일 것입니다.

## 2-2.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위성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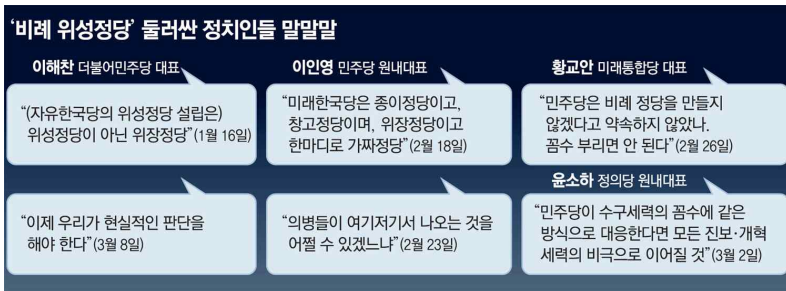


사진 출처 : 동아일보

바로 1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적폐 청산의 대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의회 등 대의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소수정당에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므로 소수 의견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대형 정당의 의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승자독식에 따른 소수자들의 의견 미대변, 지역주의에 따른 정당 간 정책 경쟁의 약화를 문제 깊으면서 비례

대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지역주의 타파, 선거제 개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득표율에 따른 의석 비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지지자들이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이 먼저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썼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적폐 청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야당에 맞서기 위해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취지를 파괴해도 된다는 논리는 승리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선거에서 야당을 이기기 위해 소수정당의 표를 빼앗아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비례한국당이 우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는 발언이 이를 증명합니다.

### 2-3. 2021년, 보궐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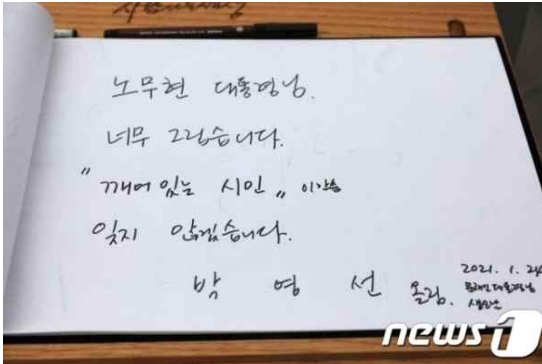


이재명  
@Jaemyung\_Lee

...

<800만 부울경의 염원에 한 발 더 다가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는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할 그 날을 기대합니다.>

사진출처 : 이재명 SNS



사진출처 : 뉴스1

한국의 주요 지자체인 서울, 부산 시장을 뽑는 2021년 보궐선거(4.7)에서도 정책 경쟁 없이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붙이는 주장들이 들립니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성폭력 사건이 발단된 선거지만 책임 있는 반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위기의 심화, 집값 폭등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임기 말 정권 심판론이 여기저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주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36.9%입니다. 집권 초기 70%에 육박했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염원인 장기 재집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다시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거나 보수정당의 무능을 공격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서울

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민주당다웠던 후보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영선 후보는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그리움을 방명록에 표현했습니다. 박인영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30년간의 야당 독점이 부산의 위기를 만들었다며 노무현의 꿈인 가덕도 신공항을 완성하는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영춘 후보는 부산시장을 국민의 힘이 독점하며 노무현의 꿈을 중단시켰고 경제난을 가중했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동남권의 항공 수요를 담당하는 김해공항의 활주로, 승객 수용률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절차를 거치며 다른 지역에 공항을 짓는 것보다 김해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김해 신공항을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기 결정된 적폐라는 이유로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역 균형발전을 바랐던 노무현의 꿈으로 규정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 타당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무시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의 꿈을 무시하는 적폐 세력으로 주장으로 들릴 뿐입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2007년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되었듯,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문제인 정권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을 투기꾼, 기득권으로 몰아붙이며 규제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공공기관인 LH 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터졌습니다. 작년까지 LH 사장 자리에 있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변창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투기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 3. 개혁의 탈을 쓴 민주당의 내로남불

글의 앞부분에서 우리 청년 세대는 한국사회의 문제의 원흉인 보수 정당, 이명박·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 달라는 주장을 10년 넘게 들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은 개혁으로 치장했을 뿐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동원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뿐입니다. 심지어 비리 수사에 대한 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 등 사회를 후퇴시키는 행태를 개혁이라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원한과 분노, 향수가 정치를 지배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구제, 경제난 극복 등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수많은 문제를 더

불어민주당이 해결하는 방식은 남 탓할 누군가를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K-방역을 홍보하면서 n차 대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세력을 탓할 뿐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는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재벌과 이전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고 하면서도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전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경쟁자에 대한 분노나 노무현에 대한 향수만을 자극하며 장기 재집권을 위해 독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아직 청산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면서, 경쟁자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지를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런 부끄럼 없이 원한의 정치와 민주주의 파괴를 사회 개혁으로 포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만 빼고'를 선언합시다.



### 글03

## **: 빛으로 주는 재난지원금, 빛으로 만드는 가덕도 신공항 으로 당신의 표를 가져가겠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7.8%, 아마 투표할 것은 15.7%로, 약 93%가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구도는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 운영'입니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약 50%, 국정안정 운영이 약 30% 정도로 선택받았다고 합니다.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 운영, 각각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선거 키워드입니다.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 운영이라는 키워드 모두에게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선거를 이해해야 할까요? 행진에서는 그 키워드가 '국가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모두 국가부채를 더 늘리면서 하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정말 걱정해야 하는 수준인지, 특히 20대 청년들이 정치 세력을 판단해야 하는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뤄보려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빛을 내서 하는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가

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4차 재난지원금'의 쟁점을 정리하고 행진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부채, '국가'가 지는 빚이니 괜찮다? 갚는 것은 모두 미래세대인 청년의 몫**

노동자 A가 있습니다. A는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나가 돈을 벌니다. 이 돈은 보통 노동자 A의 수입이 되고, 주거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있습니다. 만약 지출이 수입보다 커진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A가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국가의 수입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수입을 얻고, 각종 국가가 유지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과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세금'으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만약, 세금으로 얻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싶다면 국가는 빚을 내서 지출해야 하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로 국가가 채권을 팔아 돈을 빌리는 것이 국채입니다. 국채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자만 잘 갚으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정부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고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발행한 국채를 갚고 새로 시작합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재정적자, 경제성장률, 이자율이 국채 발행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적용해본다면, 한국 정부가 채무를 늘릴 때 고려해야 하는 제약 조건은 1) 성장률과 금리 2) 민간저축 3) 해외금융기관입니다. 한국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국채 발행에 대한 조건으로 민간저축이 지속 되어야 하며, 해외금융기관들이 한국 국채를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매입해줘야 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국채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부도를 내면 파산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차압해 가는 것과 다르게, 국가는 부도를 내더라도 재산을 차압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는 돈을 빌리지 못할 따름입니다. 다만, 국가부채가 과다하게 커지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신용도는 하락하기 쉽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그 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라 투자와 생산이 침체되면서 나라 경제의 고용도 위축됩니다. 또한, 과도한 민간의 부채가 정부로 이전되어 정부 재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는 규모는 얼마이고 국가부채의 적절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인지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경제력이 상이하므로, 절대적인 액수보다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좋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40%가 심리적 적정선으로 많이 이야기되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규모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

견이 있으며, 부채를 활용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도 분명 있습니다.

### **빛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우려해야 할 정도로 빠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총예산 558조 원의 약 5분의 1은 빚(적자 국채 94조 원)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늘어날 나랏빚을 갚기 위해 미래세대가 내야 할 세금(1인당 2002만 원)은 건국 후 현 정부 임기 말(2022년)까지 75년간 쌓인 국가채무에 대한 미래세대 부담(1인당 5226만 원)의 38.3%에 이릅니다. 기존에 쌓인 빚까지 더하면 이들 미래세대는 5200만 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은 채로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진출처 :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빛을 내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생산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쓸 때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와 토론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선거 승리나 지지율 확보를 위해 발

행하는 국가부채가 가장 질이 나쁜 부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겠다고면서, 적자 국채 9.9조를 발행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한 각종 건설 사업도 남아있습니다. 만약 증세하지 않는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언제든지 다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국가부채 확대에 대한 별다른 경계가 없습니다.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재난지원금을 4번이나 지급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으로 이루어지면서, 생계보조 정책이라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했고, 수요 진작 정책이라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약했고, 중산층은 원래 하려던 소비를 대체했을 뿐이었습니다. 선별적 지급으로 이어진 2,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노동자 고용 긴급안정지원금 등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규모로 누가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가부채 증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경제성장률과 미래세대**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점 더 낮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GDP 증가속도가 점점 더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앞으로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

원의 2017년 공동연구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초가 되면 1%대로 떨어집니다. 2030년대부터는 0%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전부터 이미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하락세였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봐도 확장 재정, 즉 정부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고성장인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 경기 침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효과적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성장이 담보되지 못하면 확장 재정은 일시적 효과만 가지며,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만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침체가 길어지면 적자가 또 다른 적자를 낳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세대 간 정의 문제가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적자로 인한 혜택은 현세대가 누리면서 적자 비용은 후세대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늘어난 빚은 청년들이 노동하며 갚아야 할 빚입니다. 가파르게 솟고 있는 국가부채증가율만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미래세대를 위해 진정으로 베풀어야 할 정의는 빚으로 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연 올해 문재인 정부가 빚을 내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합리적인 정책이었을까요? 앞으로 빚을 내서 지어야 할지도 모르는 가덕도 신공항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봅시다.

##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덕도는 부산광역시에 속해있는 섬으로,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당의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아주 간략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표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니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특별법 통과는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법률문제를 따지는 법무부가 모두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판했고 시민단체, 언론 역시 특별법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청와대가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국토교통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고 반대의견을 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자리서 사과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데 청와대만 진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프랑스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가덕도는 안전성·경제성 모두 최하위였습니다. ADPi는 가덕도 공항이 태풍·해일 등에 취약하고 바다를 메워야 해 지반까지 약하다고 했죠.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되었고 당시 영남지역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의 합의하여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안전사고 위험, 침하 가능성, 환경 파괴, 경제성 하자 등 7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비도 부산시가 전망한 7조50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28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인천공항 사업비의 3배 정도에 이르는 ‘메가톤급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안전성, 환경 침해 여부, 경제성 등에 대해 여러 논란과 반대가 있음에도 청와대와 부산시장 후보들은 ‘균형 발전’, ‘동남권 메가시티 형성’이라는 명목으로 특별법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적절한 토론과 절차를 지키며 정책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적법하고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공항 건설을 강행한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모델로 삼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4차례의 타당성 조사 끝에 영종도를 입지로 확정하고 이듬해 관련법을 제정했다는 점과 매우 비교됩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대표행위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고 주장했지만 정말 신공항 건설이 국가의 대계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노무현의 꿈과 부산 시민의 꿈을 이를 수단이라고 가덕도 신공항을 강조하지만, 이전부터 행해져 온 경제성, 타당성 평가에서 받은 낮은 점수를 무시합니다. 낮은 평가 점수를 노무현에 대한 향수로 대신 메꾸며 시민의 행복이 곧 노무현의 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착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등 여당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노무현의 꿈과 문재인 의지’이므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정책이 합리성, 민주성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향한 ‘지지’가 기준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특별법 통과와 비합리성과 반민주성을 강조하면서 대표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 재난지원금 무조건 옳은 걸까? 올바르게 평가해보기

작년 처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어느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2,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너나 할 것 없이 공약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사설의 제목을 보면 비판적 의견이 많습니다. “선거 앞

두고 있다지만 이런 졸속 추경은 없었다(중앙일보).”, “2주 만에 8조 원 푹푹… 선거 앞두고 확 늘어난 재난지원금(동아일보)”. ‘재난지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너무나도 필요해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왜 주요 언론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일까요? 취약계층과 코로나 피해를 지원해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재난지원’이라는 명분 외에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나라에 장기적으로 끼칠 영향이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윗부분에서 국가의 수입은 세금이고 세금으로 얻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단기간에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한다고 싶었습니다. 세금의 원천은 시민들의 노동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채는 미래 세대들의 노동으로 빚을 갚을 것을 담보로 국가가 빚을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호황일 것으로 기대되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시민 일 인당 노동생산성도 늘어나니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미래세대가 노동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노동에 투입할 미래 세대들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예산을 섬세하게 계획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진세 등 빚(국채) 말고도 다른 재정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성장 시기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재정이

필요한 곳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는 것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지원금을 평가해보려 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및 기존(유사)사업 실적행률]

(단위: 백만원, %)

분야	사업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변경안)	2·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중 동일(유사) 사업	제2차재난지원 프로그램 실집행률	제3차재난지원 프로그램 실집행률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35,046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83.5	93.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	456,277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7.4	75.5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계층 긴급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6,000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98.4	94.6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30,900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0.1
	한시생계지원금	406,608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3.4	-
	고용유지지원금	203,280	고용유지지원금	100.0	17.9
긴급 고용대책	국민취업지원제도	120,253	국민취업지원제도	-	1.7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52,000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14.7	-
	희망근로 지원사업	213,026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72.4	-
	코로나19 해피 백신 도입	373,117	코로나19 백신 구매	27.2	-
방역 대책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650,000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31.5

주: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실적행률은 2020. 12. 31. 기준,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실적행률은 2021. 2. 15.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3월 25일 국회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15조 원 규모이고 그중에서는 9.9조 원은 국회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의 표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전 재난지원프로그램과 겹치거나, 아직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돌봄 노동자 지원, 돌봄 비용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2차~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도 현황]

구 분	2차	3차	4차
지급시기	2020년 9월경	2021년 1월경	2021년 3월말(예정)
지원대상(계획)	294만개	280만개	385만개
재경소요	3.3조원	4.1조원	6.7조원
지급단가	100~200만원	100~300만원	100~500만원

[2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 현황]

구 분	2차	3차	4차
지급시기	2020년 9월경	2021년 1월경	2021년 3월말(예정)
지원대상(계획)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 법인택시기사: 10만명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 법인택시기사: 8만명 · 돌봄서비스종사자: 9만명	· 특고·프리랜서: 80만명 · 법인택시기사: 8만명 · 돌봄서비스종사자: 6만명
재경소요	0.7조원	0.5조원	0.6조원
지급단가	· 특고·프리랜서 -50만원 ~ 150만원 · 법인택시기사 -100만원	· 특고·프리랜서 -50만원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50만원 · 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 특고·프리랜서 -50만원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70만원 · 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3.3

조 원-4.1조 원-6.1조 원) 다른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 돌봄 노동자의 지원 규모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0.7조 원-0.5조 원-0.6조 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지원대상의 만족도, 폐업 여부 등 ‘사업 효과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을 선별해 지원 효과를 높일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필요한 곳과 제대로 된 사용 여부 감시 외에도 미래세대에게 오는 부담을 점검해봅시다. 이번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의 통과로 인해 기존 계획보다 재정적자가 약 15조, 국가채무가 약 10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중장기 재정 계획과 재정 확충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만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을 찾아 지원 요건과 절차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지출 속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계획(ex. 세수 확충)을 마련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뒤엎으면서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과 토론 없이 갈등으로 치달는 정치 구도를 비판하자.**

명분은 번지르르하지만, 비합리적이고 경제학적 기준이 없는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다들 명분을 내세울 뿐, 실제 효과는 적절한지, 합리적인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모든 절차와 기존 결정을 뒤엎고 ‘노무현의 꿈’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재난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효과와 지급 기준에 대한 검증 없이 일단 빛을 내고 보자는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습니다.

선거 시기에 등장하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 국가의 재정, 다시 말해 국민이 낸 세금을 들인 사업으로 국민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대표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이슈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모두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지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누가 차악인가를 가르는 선거가 아니라 누구를 뽑아도 최악인 선거에서 미래세대로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봅시다. 그 목소리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국민의힘도 빼고’입니다.

〈참고자료〉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한지원, 2021, 한빛비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과 위험 요인들, 사회진보연대, 20,10,07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048>

연구보고서 19-17 국가부채 현황 및 재정위험 관리방안 연구,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9.12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이투데이, 21.03.02

(검색일 21.03.31)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0031>

문 정부가 늘린 나라빚, 미래세대 1인당 세부담 2002만원, 중앙일보,  
20.09.03. (검색일 21.03.10)

<https://news.joins.com/article/23863354>

과다한 국가부채는 경제성장의 장애물, 이승훈, KDI 경제정보센터,  
13.01.29 (검색일 21.03.31)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lick\\_dx=1908](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lick_dx=1908)



홈페이지 주소

[stulink.me](http://stulink.me)

SNS

인스타그램 : [stu\\_link](https://www.instagram.com/stu_link)

페이스북 : [facebook.com/studentmarch](https://www.facebook.com/studentmarch)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학생 활동가, 전국학생행진.